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7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김준혁 · 김남근 · 김문수  
김재원 · 손명수 · 이언주  
조계원 · 최혁진 · 추미애  
황명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권장·보호·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화·인터넷·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노인·청소년·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향유 주체에 대한 차별 예방 기준
2.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작자 교육 기준
3. 알고리즘 또는 콘텐츠 추천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 기준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u> 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u>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u> ----- ----- ----- ----- ----- -----.
②·③ (생략) <u>&lt;신 설&gt;</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화·인터넷·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 · 노인 · 청소년 · 이주  
민 등 다양한 문화 향유 주체  
에 대한 차별 예방 기준

2.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  
작자 교육 기준

3. 알고리즘 또는 콘텐츠 추천  
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 기준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